

1. 정치와 법 수업시간에 선생님은 다음과 같은 <보기1> 사례를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다.

<보기1>

oo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사업 후 조합원의 이익이 1인당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거는 관련법에 대하여 부담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하였다. 소송 진행 중 oo조합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근거법령이 자신들의 아파트와 관련한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해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해당 법의 환수조항 등은 재건축 조합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라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선생님은 설명을 한 이후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각자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해보라 하였다. 이에 따라 6명의 학생들이 다음 <보기2> 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보기2>

- ㉠ 학생 “해당 사안에서 원고가 침해를 주장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환수 조항에 의하여 원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핵심적 권리로서 소극적 방어적 포괄적 성격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 학생 “위 사안에서 만약 원고가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학생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위해서는 출석 재판관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 ㉣ 학생 “위 사안에서 아마도 헌법재판소는 바로 위헌으로 판단 시 행정부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혼동으로 인한 행정공백 등의 사태가 우려되어 일정시한까지 입법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 ㉤ 학생 “위 사안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법원을 대표하는 최고 법원인 대법원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 ㉥ 학생 “부담금 처분 취소의 소에 대하여 판사의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재판부의 독자적인 판단을 하여야 하는 행정법원 재판부는 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내리기 이전에 원고의 소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보기2> 의 학생들 중 옳은 의견을 제시한 학생들의 모두 몇 명인가?

-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⑤ 6명